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필요성

KBIZ중소기업연구소 김은하 연구위원

I.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 지역 경제 내 중소기업의 양적 위상

- 전국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특히 지역 경제의 기반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99.8%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99.9%¹⁾

표 1 시도별 중소기업 기업체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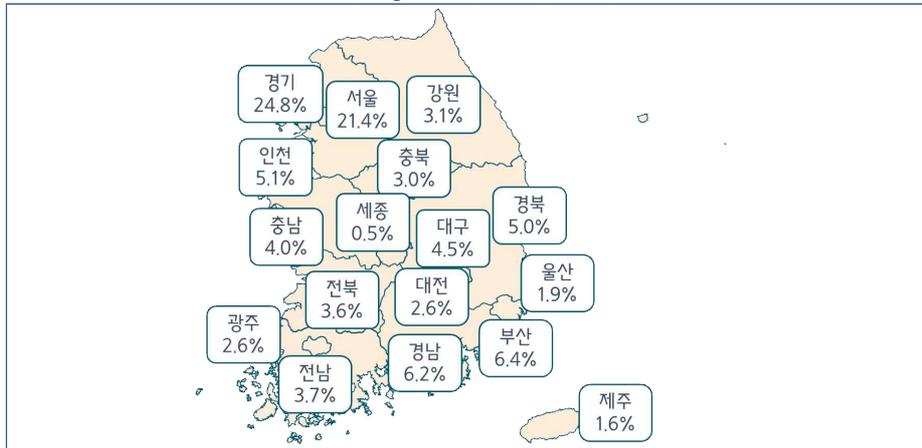
단위 : 개, %

시도	전체(A)	중소기업 (B)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 (B/A)
전국	6,893,706	6,888,435	5,271	99.9%
서울	1,476,903	1,474,464	2,439	99.8%
부산	441,015	440,750	265	99.9%
대구	309,380	309,276	104	99.9%
인천	353,941	353,767	174	99.9%
광주	181,337	181,228	109	99.9%
대전	178,323	178,256	67	99.9%
울산	127,771	127,682	89	99.9%
세종	34,642	34,608	34	99.9%
경기	1,706,488	1,705,431	1,057	99.9%
강원	211,016	210,955	61	99.9%
충북	205,071	204,934	137	99.9%
충남	276,965	276,774	191	99.9%
전북	248,043	247,954	89	99.9%
전남	256,529	256,443	86	99.9%
경북	347,461	347,313	148	99.9%
경남	427,805	427,617	188	99.9%
제주	111,016	110,983	33	99.9%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1)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개인, 회사법인)를 대상으로 작성, 해당 자료는 기업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체 단위 통계와는 다를 수도 있음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 분포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 중소기업은 지역 고용의 핵심적 역할 담당

- 중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2,108만 명 중 1,744만 명으로 82.7%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65.2%)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지역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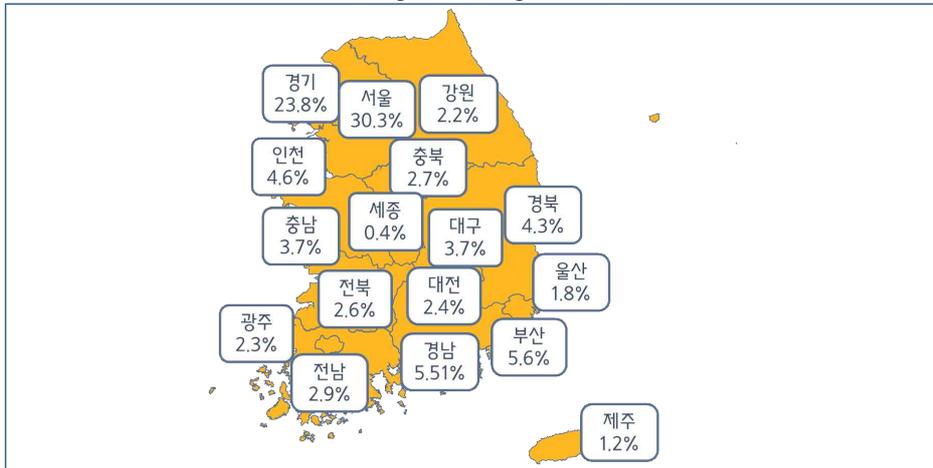
표 2 시도별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

단위 : 명, %

시도	전체(A)	중소기업 (B)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 (B/A)
전 국	21,076,582	17,439,595	3,636,987	82.7%
서 울	6,382,102	4,159,042	2,223,060	65.2%
부 산	1,181,590	1,098,200	83,390	92.9%
대 구	782,143	738,415	43,728	94.4%
인 천	967,638	874,501	93,137	90.4%
광 주	475,077	441,771	33,306	93.0%
대 전	498,663	434,757	63,906	87.2%
울 산	389,074	344,092	44,982	88.4%
세 종	83,217	73,706	9,511	88.6%
경 기	5,017,793	4,372,369	645,424	87.1%
강 원	471,826	447,150	24,676	94.8%
충 북	569,814	531,350	38,464	93.2%
충 남	771,363	698,919	72,444	90.6%
전 북	553,260	529,980	23,280	95.8%
전 남	604,247	566,662	37,585	93.8%
경 북	906,661	820,802	85,859	90.5%
경 남	1,169,235	1,068,065	101,170	91.3%
제 주	252,879	239,814	13,065	94.8%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 분포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

- 중소기업의 매출은 2,732 조원으로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 비중이 48.7% 수준이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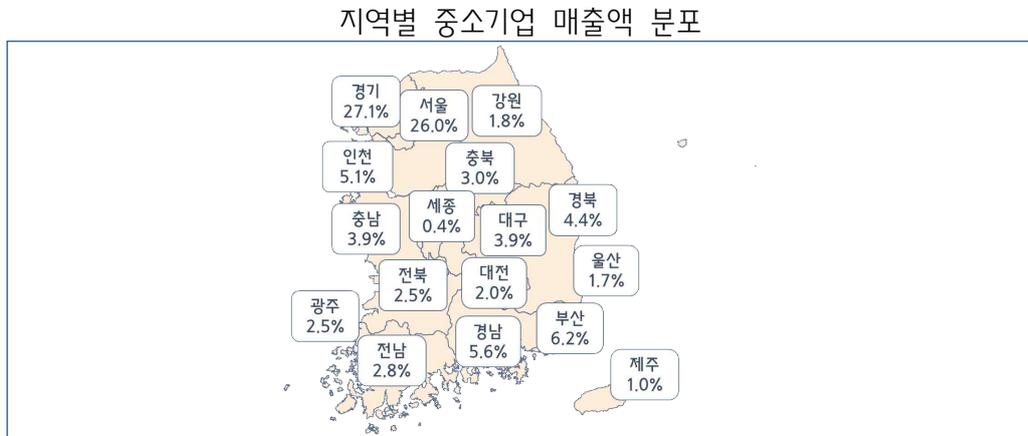
표 3 시도별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

단위 : 억 원, %

시도	전체(A)	중소기업 (B)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 (B/A)
전 국	56,063,181	27,320,538	28,742,643	48.7%
서 울	24,243,093	7,108,767	17,134,326	29.3%
부 산	2,417,446	1,694,673	722,773	70.1%
대 구	1,318,413	1,057,996	260,417	80.2%
인 천	2,173,295	1,393,559	779,736	64.1%
광 주	902,133	683,893	218,240	75.8%
대 전	981,594	558,678	422,916	56.9%
울 산	899,011	460,948	438,063	51.3%
세 종	191,471	101,367	90,104	52.9%
경 기	12,634,223	7,400,617	5,233,606	58.6%
강 원	589,710	495,083	94,627	84.0%
충 북	1,077,204	830,218	246,985	77.1%
충 남	2,001,275	1,066,227	935,049	53.3%
전 북	854,625	691,487	163,138	80.9%
전 남	1,057,151	765,528	291,623	72.4%
경 북	2,040,963	1,207,618	833,345	59.2%
경 남	2,334,041	1,529,786	804,256	65.5%
제 주	347,535	274,096	73,439	78.9%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 중소기업 전체 매출 2,732 조 원 중 경기 27.1%, 서울 26.0%, 인천 5.1% 순으로 높은 매출 발생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 2020년 기준,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19.7%였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의 수출에 평균을 상회하는 기여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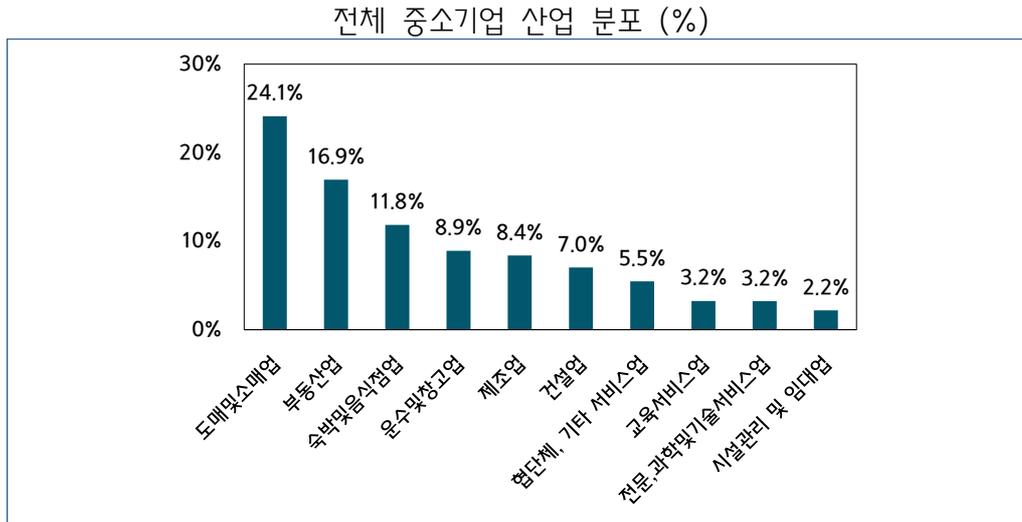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시도	총수출 (A)	중소기업 (B)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중소기업 비중 (B/A)
전 국	512,498	100,712	89,325	321,200	1,260	19.7%
서 울	158,877	24,842	17,616	116,263	155	15.6%
부 산	11,503	6,437	4,245	818	3	56.0%
대 구	5,512	2,757	2,124	630	1	50.0%
인 천	36,528	6,019	13,662	16,839	8	16.5%
광 주	4,464	900	3,562	0	1	20.2%
대 전	4,719	1,296	1,449	1,712	261	27.5%
울 산	23,920	1,297	3,272	19,351	0	5.4%
세 종	663	204	235	220	4	30.7%
경 기	173,745	31,988	20,989	120,681	87	18.4%
강 원	1,150	784	155	206	6	68.1%
충 북	10,673	4,638	4,546	1,487	2	43.5%
충 남	21,726	5,167	4,744	11,792	23	23.8%
전 북	3,439	1,378	1,533	526	2	40.1%
전 남	6,773	1,274	969	4,507	24	18.8%
경 북	17,725	5,357	3,023	9,341	4	30.2%
경 남	30,276	6,191	7,197	16,822	66	20.4%
제 주	195	183	3	5	4	93.8%
지역미상	610	-	-	-	610	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

□ 지역별 중소기업 산업 분포 현황

- 전체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소매업 (24.1%)이고, 부동산업 (16.9%), 숙박 및 음식점업 (11.8%), 운수 및 창고업 (8.9%), 제조업 (8.4%) 순서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 중소기업 중에서도 부동산업 (6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3%), 정보통신업 (80.5%), 금융 및 보험업 (70.8%)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92.4%)과 농업, 임업 및 어업 (84.6%), 광업 (90.3%)은 압도적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도 비수도권에 집중 (61.4%)

표 6 수도권·비수도권별 산업별 중소기업 분포 현황

순번	산업 (대분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개)	기업 (개)	비중	기업 (개)	비중
1	도매 및 소매업	1,661,006	857,735	51.6%	803,271	48.4%
2	부동산업	1,166,553	731,688	62.7%	434,865	37.3%
3	숙박및음식점업	815,162	338,132	41.5%	477,030	58.5%
4	운수 및 창고업	613,985	305,435	49.7%	308,550	50.3%
5	제조업	577,345	296,124	51.3%	281,221	48.7%
6	건설업	484,238	208,873	43.1%	275,365	56.9%
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5,529	171,057	45.6%	204,472	54.4%
8	교육서비스업	223,458	114,012	51.0%	109,446	49.0%
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2,144	147,246	66.3%	74,898	33.7%
1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0,315	81,414	54.2%	68,901	45.8%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45,239	76,807	52.9%	68,432	47.1%
12	정보통신업	125,427	101,010	80.5%	24,417	19.5%
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94,195	7,187	7.6%	87,008	92.4%
14	농업, 임업 및 어업	88,457	13,604	15.4%	74,853	84.6%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7,704	40,712	52.4%	36,992	47.6%
16	금융 및 보험업	53,711	38,001	70.8%	15,710	29.2%
17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1,313	4,367	38.6%	6,946	61.4%
18	광업	2,654	258	9.7%	2,396	90.3%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II.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경제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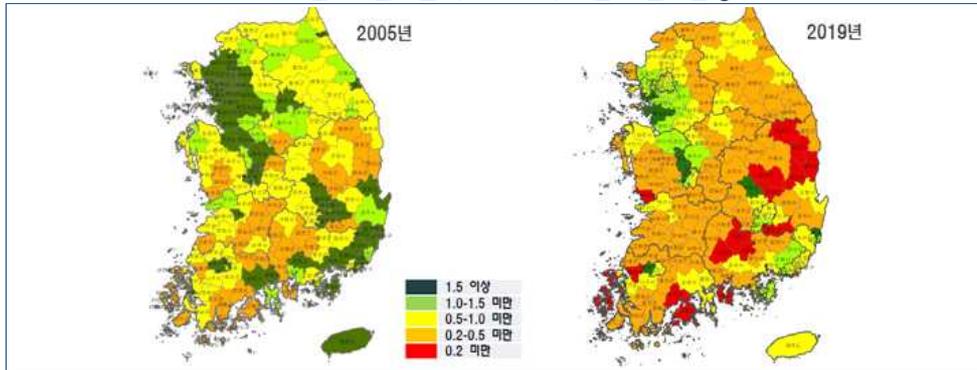
1. 한국의 지역소멸 위기 현황

□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도시화로 수도권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중 46.9%가 소멸위기에 처함

* 소멸위험지역 : 17년(85곳), 18년(89곳), 19년(93곳), 21년(106곳)으로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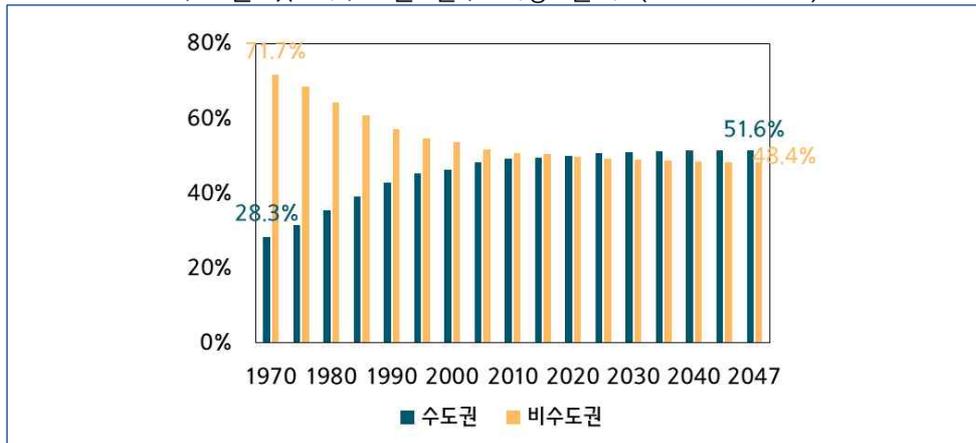
2019년 기준 한국의 지역소멸위험 현황²⁾



출처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11.14.)

- 1970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28.3%에 불과했지만, 2047년에는 인구전체의 51.6%가 수도권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비중 변화 (1970-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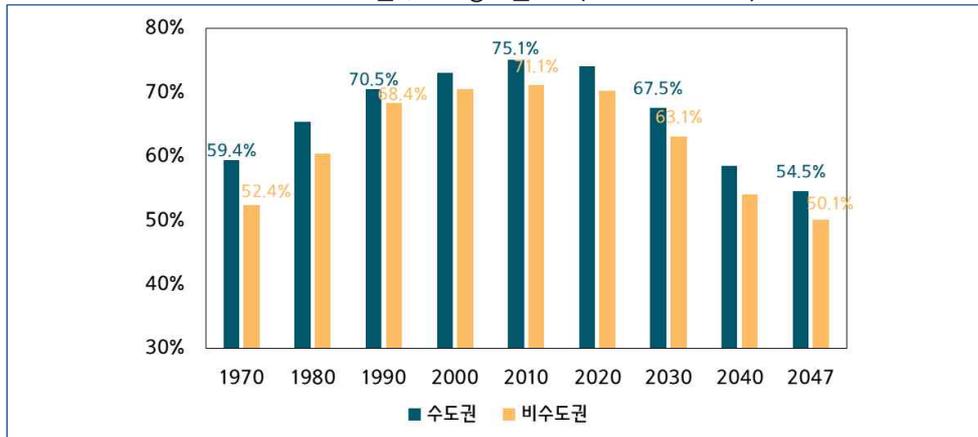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 높음, 소멸위험지역 지수는 0.5 미만

□ 생산에 중요한 인구는 비수도권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 추세

- 핵심노동연령대(30~64세) 인구 비중이 1%p 하락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1%p 상승 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만큼 (국가예산정책처, 2021) 인구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함
- 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수도권이 2011년 75.4% 비수도권은 2014년 71.7%로 정점을 찍고 모두 하락하는 추세지만, 2047년 비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15~64세 인구 비중 변화 (1970-2047)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비수도권 인구는 더 빠르게 노화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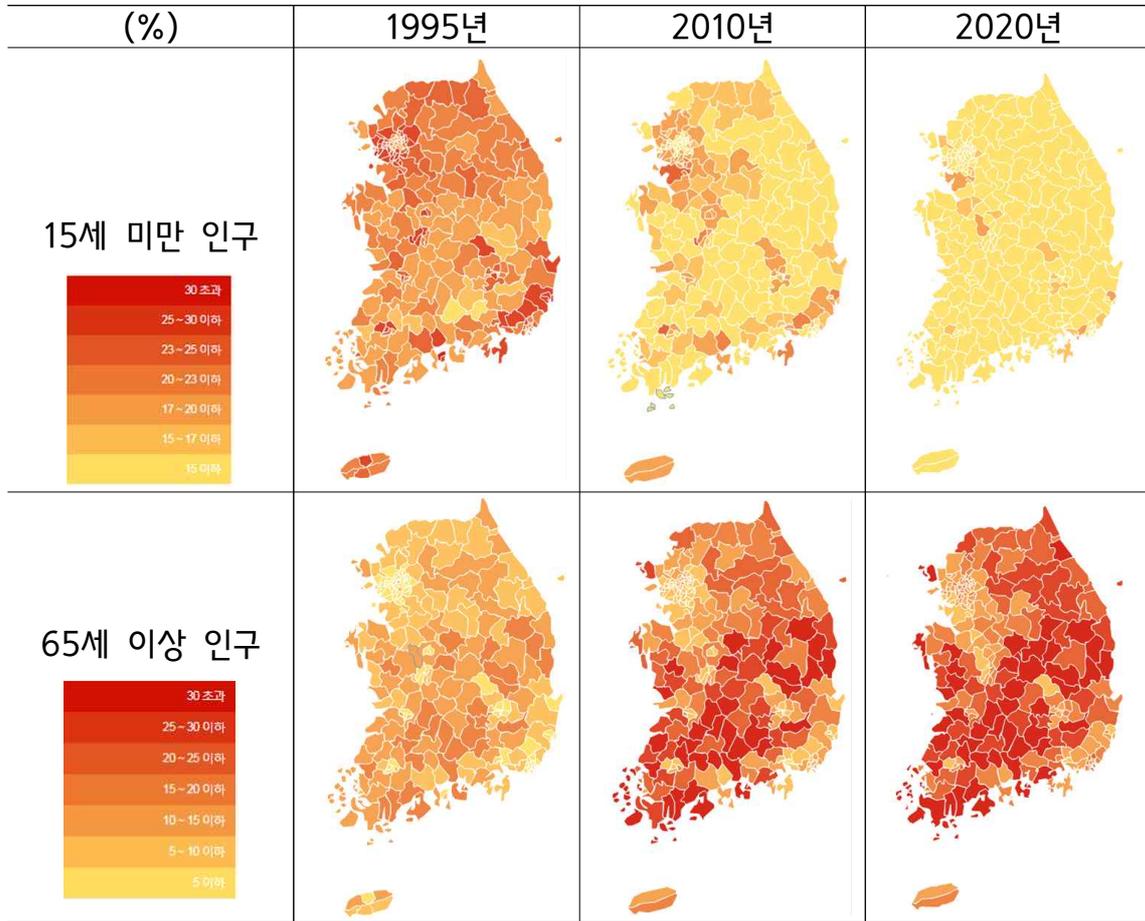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항상 높았지만, 최근 비수도권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1970-2047)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시도별 저 출산 및 고령화 심화 현황



- 학령인구의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이 발생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당 재정 현황 격차 발생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전국 미충원 40,586명 충원율 91.4%, 비수도권이 30,458명 및 충원율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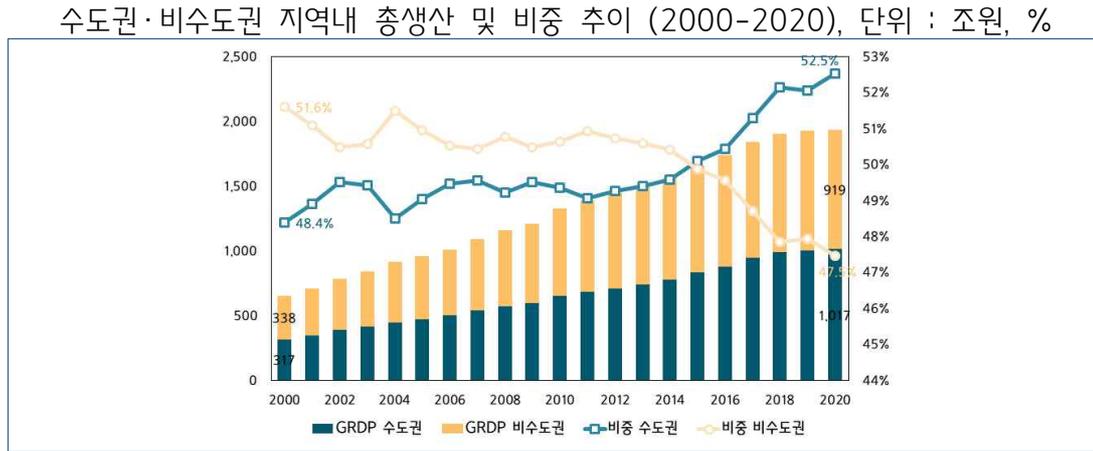
* 2018년 사립대 학생 1인당 재정 현황 : 수도권 (2,176만원), 지방 (1,506만원, 수도권의 69.2%)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 인구 감소보다 지역 경제 붕괴로 인한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성장을 통한 청년 유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 등이 절실 (국회입법조사처, 2021)

2. 수도권·비수도권 경제의 양극화 현상

□ 지역내 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 격차

- 지역내총생산 (명목)은 2000년 비수도권이 더 많아 51.6%를 차지했으나, 그 값이 2015년 역전되어 2020년 수도권이 전국의 52.5%를 차지하며 그 비중은 증가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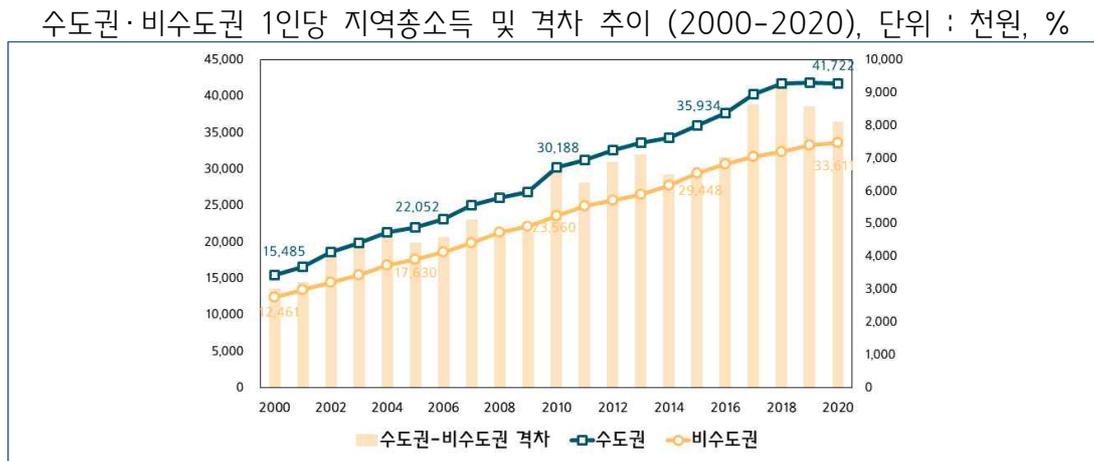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지역소득」

* GRDP :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

□ 지역총소득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 GRNI) 격차

- 지역총소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지역소득」

* 지역총소득 (GRNI) 또는 총본원소득 (Gross Primary Income : GPI): 지역내총생산 (GRDP)로부터 지역 외부로부터 수취한 본원소득은 더하고 지역 외로 지급한 본원 소득을 공제한 값

□ 부가가치 격차

- 지난 20년간 국가의 총부가가치가 592조원 (2000년)에서 1,772조원 (2020년)으로 3배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역전되어 비수도권의 비중은 51.2%에서

47.3%로 3.9%p 감소

부가가치 및 수도권·비수도권 부가가치 비중 변화 (2000-2020), 단위 : 조원,
%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

□ 기업 수출 격차

- 수도권 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9년 63%에서 2020년 72%로 그 비중이 9%p 증가

수도권·비수도권 수출금액 및 수도권 비중(2009-2020), 단위 :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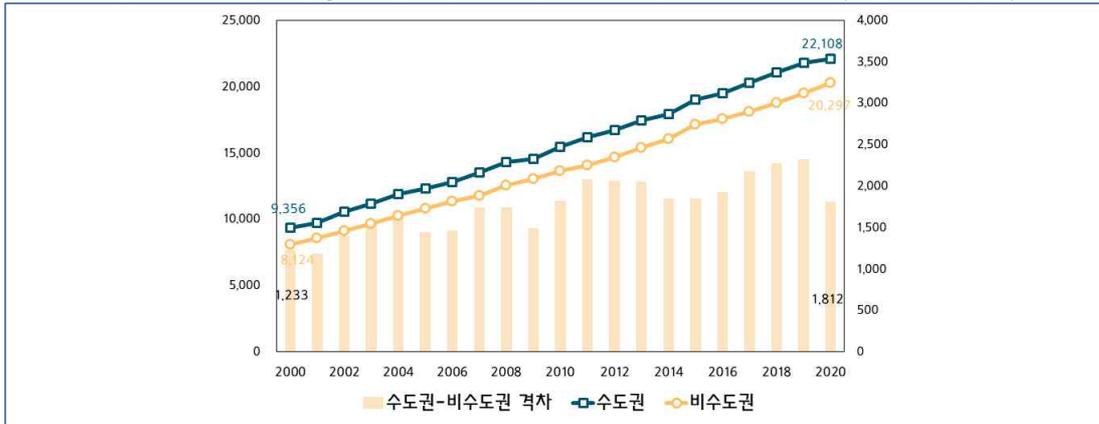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

□ 개인소득 격차

- 2020년 1인당 개인소득 전국 평균은 2,121만원으로 수도권은 평균 2,211만원, 비수도권은 2,030만원
-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은 2.9%, 비수도권은 3.8%로 비수도권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

수도권·비수도권 1인당 개인소득 및 격차 추이 (2000-2020), 단위 : 천원,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지역소득」

□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 2021년 4월 기준, 지역별 월평균 임금은 최저 307만원 (제주)부터 최고 445만원 (서울)까지 1.4배 차이가 남

지역별 임금수준 (2021년 4월 기준),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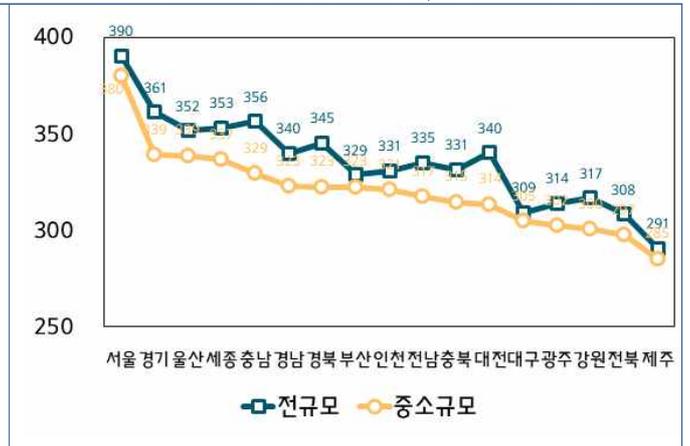
출처 : 대한민국일자리상황판,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

- 다만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기업의 근로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규모별 근로시간 수준, 단위 : 시간



지역별·규모별 임금 수준*, 단위 : 만원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2021년 4월 기준)
중소규모 : 고용인원 3~299인

*상용월급여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일자리상황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 격차

- 상용직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그 격차가 크진 않지만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수도권이 26.1%p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21.4%p 상승해, 수도권의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성장

* 상용직 비중³⁾ :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100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용직 비중(2000-2021),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다만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대폭 상승하여 2020년 기준 비수도권은 37.9%, 수도권 34.9%로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남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2021)

3)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현물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

상용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

□ 청년 고용률 격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고용률 격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코로나19 이전 그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2020년에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동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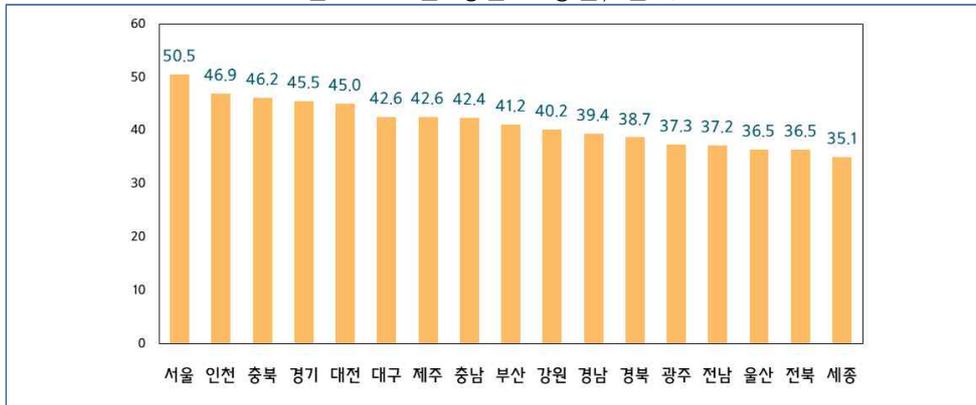
* 청년고용률 : 15~29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15\sim 29\text{세 취업자} \div 15\sim 29\text{세 인구}) \times 100$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고용률 (2000-2020),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시도별 2021년 청년 고용률,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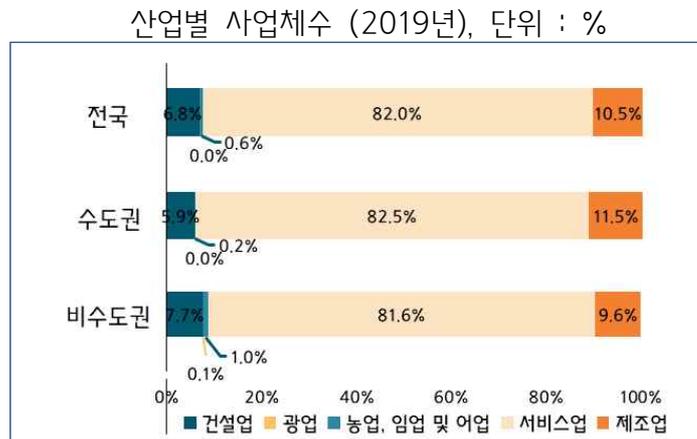
Ⅲ. 지역 기업의 불균형 성장과 활력 저하

1. 지역 기업의 활력 저하가 경제 양극화의 원인

□ 고부가가치의 산업 구조로의 재편 지연

○ 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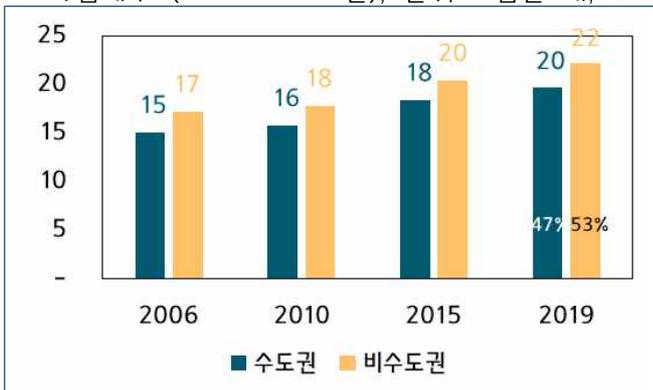
-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건설업 (+1.8%p), 광업 (+0.1%p), 농업, 임업 및 어업 (+0.8%p)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 (Δ0.9%p)과 제조업 (Δ1.9%p)의 비중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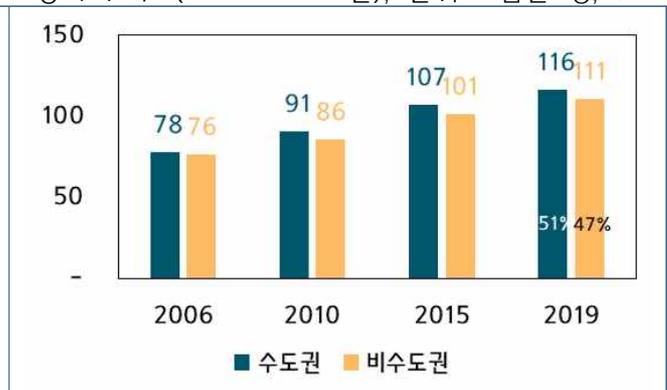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수도권의 사업체 수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사업체의 4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종사자 수는 동 기간 51%를 유지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적은 영세한 기업이 많음

사업체수 (2006-2019년), 단위 : 십만 개, %



종사자 수 (2006-2019년), 단위 : 십만 명, %



출처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전국사업체조사」

- 지역소득 경제 구조로 살펴봤을 때에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높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농·임·어업 모두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음

수도권 (2000-2020), 단위 : %

비수도권 (2000-202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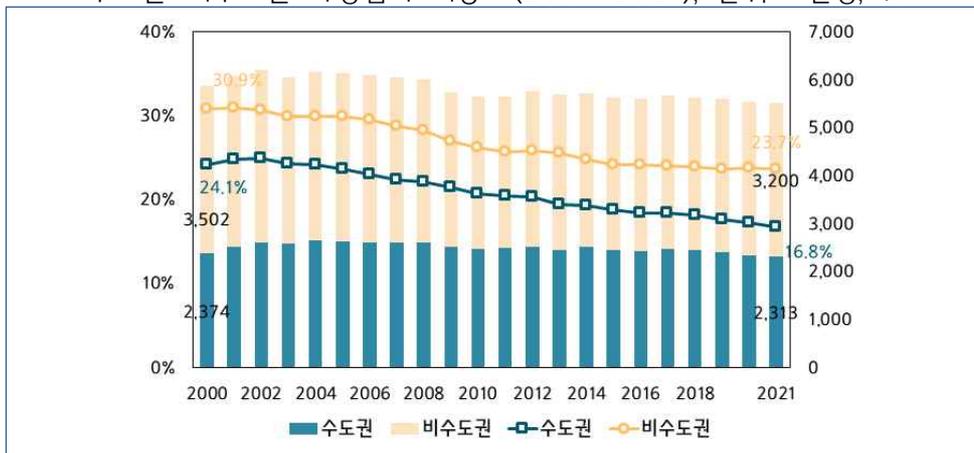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 명목소득

□ 비수도권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

-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02년 최고치 (6,212 천명) 기록 이후 과당 경쟁 등으로 감소 추세

수도권·비수도권 자영업자 비중* (2001-2021),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중은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전체 취업자 대비

□ 지역 기업 생태계 활력 격차

○ 창업기업

-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기업은 2016년 53%에서 2020년 56.5%로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창업기업 비중은 감소

수도권·비수도권 창업기업 수, 단위 : 천개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도권	630	670	747	703	839
비수도권	559	586	596	581	645

수도권·비수도권 창업기업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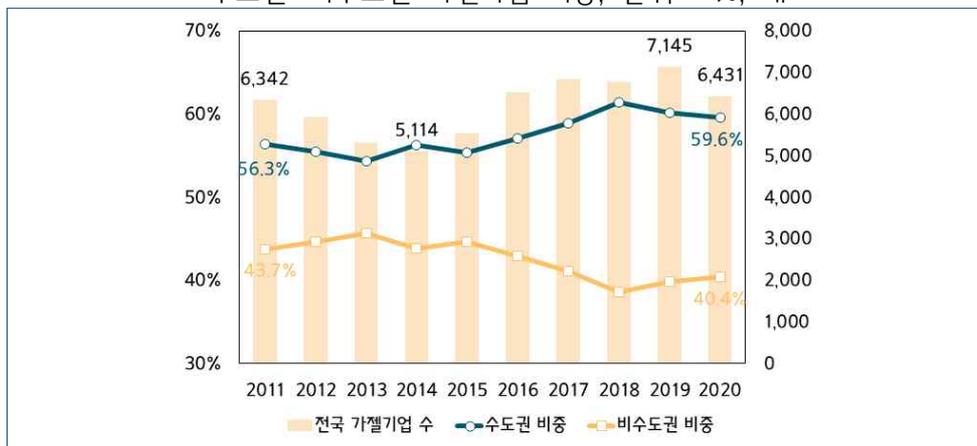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 가젤기업

- 설립 5년 이하의 젊은 기업 중 고성장하는 가젤기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가젤기업 :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최근 3년간 고성장 기준 (①매출액, ②상용근로자, ③매출액 & 상용근로자)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영리기업 중 '사업자등록 5년 이하'인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가젤기업 비중, 단위 :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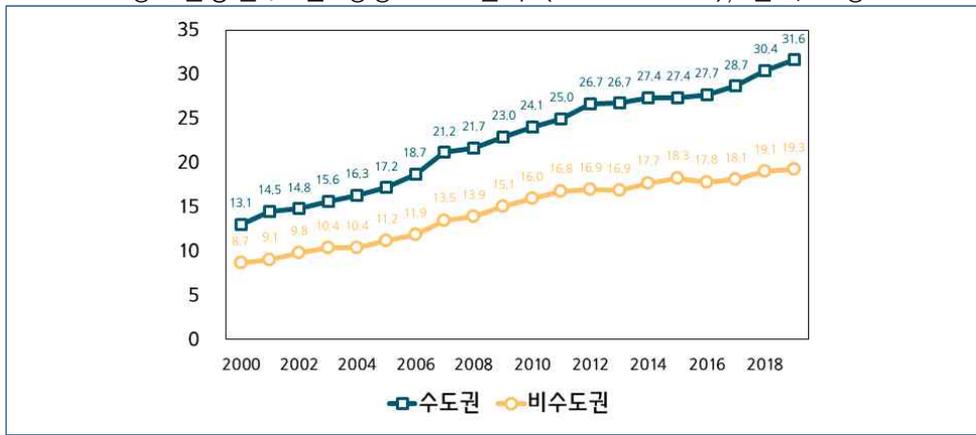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지역 기업 혁신 역량의 격차

○ R&D 인력

-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R&D인력은 201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1.6배
- 2000-2019년 사이 연평균증감률은 수도권이 4.8%, 비수도권은 4.3%로 수도권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며 격차를 벌이는 중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R&D인력 (2000-2019),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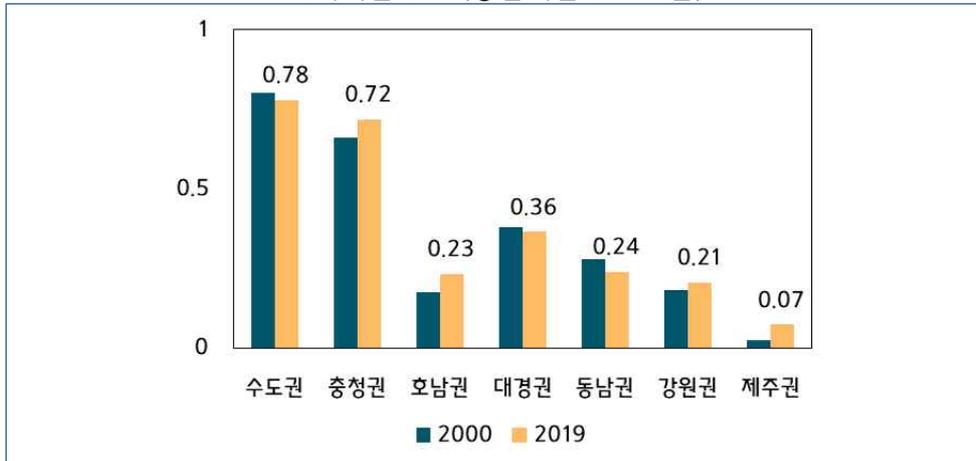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지역혁신지수⁴⁾

- 종합 혁신지수 기준, 전반적인 혁신활동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월등히 높음
- 시도별로 구분했을 때, 대전이 1위, 경기도가 2위, 서울이 3위, 하위지역으로는 원(14위), 전남(15위), 제주(16위) 순으로 조사 이후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한 편중 현상 지속
-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투자는 산출 지표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과 최종성과 지표인 지역 내 총생산에도 정의 효과를 미침 (산업연구원, 2018)

지역혁신지수 (종합혁신지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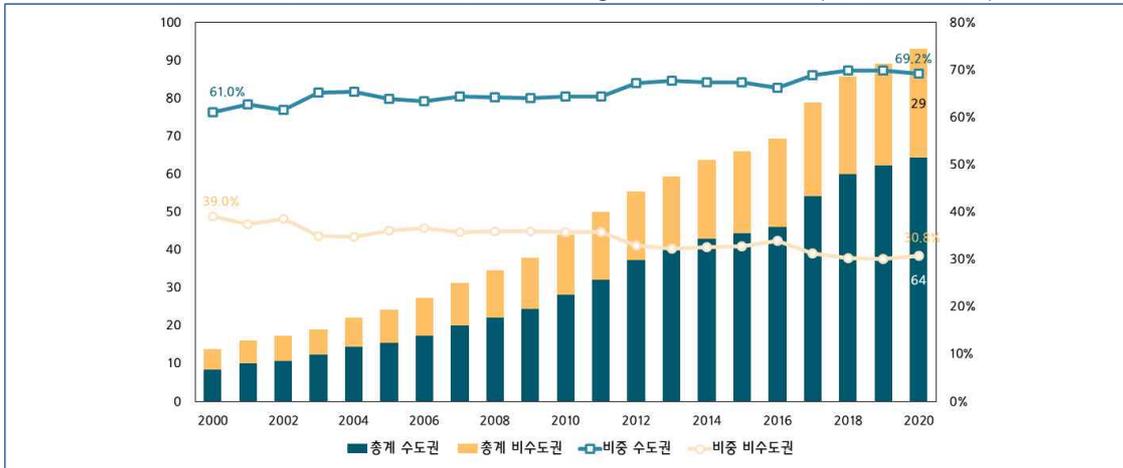
출처 : 산업연구원

○ R&D 투자 현황

- 2020년 수도권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69.2%이며, 경기 지역의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50.5%를 차지하며 서울은 15.5%를 차지
- 수도권에 대전 지역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78.7%를 차지

4) 「지역혁신지수(Regional Innovation Index)」는 혁신에 필요한 요소 투입 및 그 산출물의 활용 등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혁신활동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로, 혁신투입부문 종합지수 (인적자원 부문지수 + 지식창출 부문지수)와 혁신산출부문 종합지수 (혁신활동 부문지수 + 지식재산권 부문지수)로 구성

수도권·비수도권 R&D 투자금액 및 비중 (2000-2020),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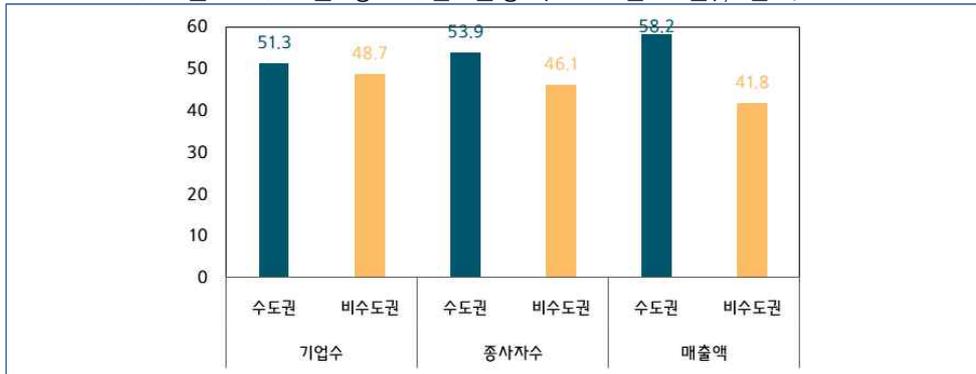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2. 지역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

□ 수도권·비수도권 중소기업 간의 격차 발생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51.3%, 중소기업 종사자의 58.7%, 중소기업 매출액의 58.2%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비수도권 내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5% 이상 집중된 경남 (6.2%), 부산 (6.4%), 경북 (5.0%)과 1%대 수준의 울산 (1.9%), 제주 (1.6%) 등으로 나뉘어 분포가 균등하지 않음
-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54.1%) 매출도 이 두 지역에서 53.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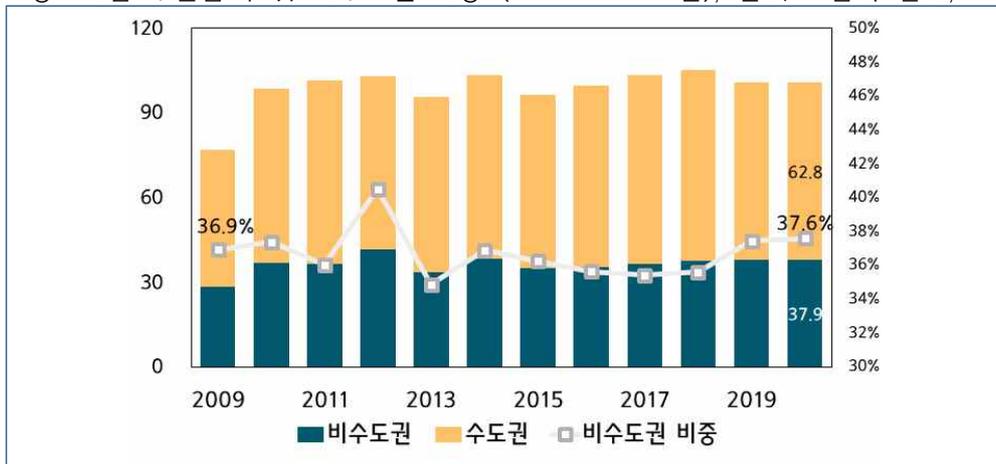
수도권·비수도권 중소기업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중소기업의 수출 역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

중소기업 수출금액 및 비수도권 비중 (2009-2020년), 단위 : 십억 달러,%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

□ 수도권·비수도권 중소기업 간의 혁신 역량 간극 지속

- 2011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용은 수도권이 9,703억, 비수도권이 8,540억 원이었지만, 지난 10년간 수도권은 연평균 7.0%, 비수도권은 연평균 6.8% 성장하며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및 수도권 비중 (2011-2020년), 단위 : 억 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 연구소와 연구원은 수도권 중소기업에 각각 65.5%, 69.2% 집중

표 7 지역별 중소기업 연구소 및 연구원 현황

		연구소		연구원	
		(개)	비중	(명)	비중
수도권	서울	11,855	29.5%	62,928	31.5%
	인천	1,787	4.5%	8,091	4.0%
	경기	12,653	31.5%	67,206	33.6%
	소계	26,295	65.5%	138,225	69.2%
비수도권	대전	1,569	3.9%	8,693	4.3%
	세종	159	0.4%	710	0.4%
	충남	1,323	3.3%	6,408	3.2%
	충북	1,099	2.7%	5,214	2.6%
	강원	463	1.2%	2,035	1.0%
	부산	1,741	4.3%	7,602	3.8%
	울산	483	1.2%	1,992	1.0%
	경남	1,783	4.4%	7,774	3.9%
	대구	1,329	3.3%	5,615	2.8%
	경북	1,356	3.4%	5,774	2.9%
	광주	767	1.9%	3,167	1.6%
	전남	685	1.7%	2,451	1.2%
	전북	896	2.2%	3,543	1.8%
	제주	190	0.5%	677	0.3%
소계	13,843	34.5%	61,655	30.8%	
총계		40,140	100%	199,890	100%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 혁신형 중소기업⁵⁾의 수도권 선호 현상

- (2019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57.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53.6%가 수도권에 집중

5) 혁신형 기업 :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경영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e-나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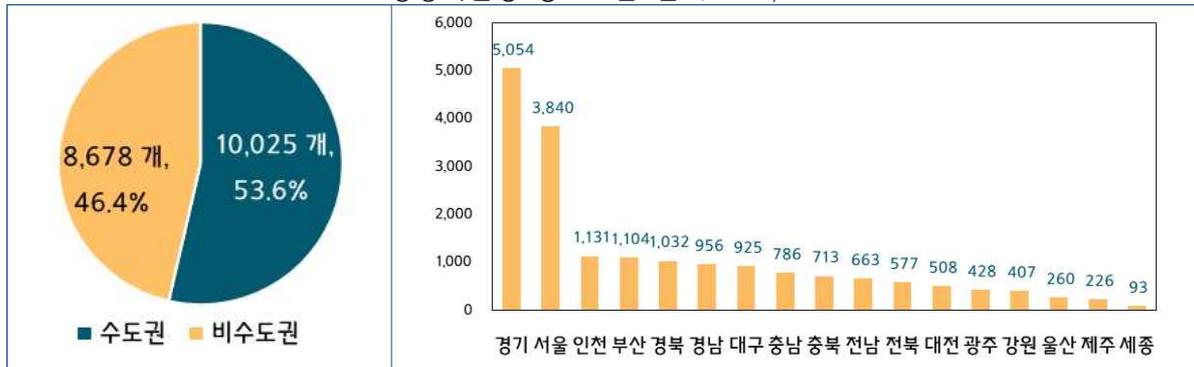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 기술성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검증받은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등 경영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단위 : 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포털 (2019년 기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단위 : 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포털 (2019년 기준)

-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일자리, 매출, R&D 투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잠재 혁신형 기업 층의 저변확대를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산업 성장의 핵심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이고, 결국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이 그 성장궤도를 함께 함

IV.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아젠다

□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

- 균형발전은 헌법에 내재하는 가치 :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은 헌법에 명시된 기회의 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의 포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 구도를 전제로 하며, 경제적, 물리적 자본의 격차가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격차까지 초래
- 이런 불균형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성장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중요
- 인구감소 및 저 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균형의 상실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심화는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사안인 만큼, 국가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수 (국토연구원, 2021)

□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 1000대 기업 중 743개 사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⁶⁾, 주요 신용카드사 사용금액의 75%가 수도권에 집중⁷⁾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도 및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심화
- 인구감소는 지역의 노동력 감소, 내수시장 축소, 과세 기반의 상실로 이어져 의료, 대중교통 및 기타 유형의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저하
- 작아지는 시장으로 인한 소비감소는 결국 고용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이어질 것
- 인구 고령화는 전체 인구 대비 노동력이 감소해 연금 및 고령 인구 관련 서비스의 부담 증가를 야기하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 및 혁신 창출이 감소할 것
-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동하는 지방 인력의 유출을 막아 지방 소멸 문제 해결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

*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90%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30%가 수도권에서 취업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2021)

- 인구감소와 더불어 제조업 중심의 지역 주력 산업 침체는 일자리 감소를 낳아, 결국 인구·지역경제·산업·고용의 모든 문제가 산업 중심의 경제정책의 축으로 함께 움직여야함을 시사

* 2018년의 인구감소지역 89곳은 국토교통부의 성장촉진지역과 10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33%,

6) 부산상공회의소 (2021). 시·도별 2020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본사 현황.

7) 한국은행 (2021). 2020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전체 14.96천억 중 11.22천억이 수도권, 개인 신용카드 금액 기준)

고용위기지역과 25% 중복 지정되어 있을 만큼 지역경제의 문제는 동시다발적·복합적으로 발생 (국토연구원, 2022)

-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혁신 주체인 중소기업⁸⁾의 성장이 지역 균형 성장의 해답
- 결국, 지역 기반의 기업 육성 전략으로 지역 창업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별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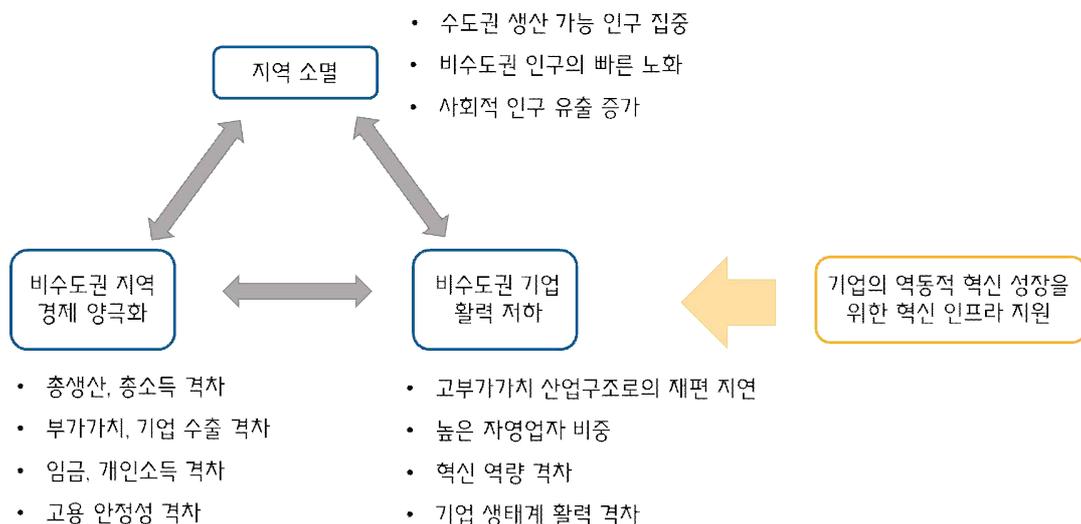
- 지방소재 기업 10곳 중 7곳, 지방 소멸 위협 느낀다고 응답⁹⁾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산업현장의 수요에 기반을 둔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기업특성별 등 다차원적인 지원 정책 필요
- 현재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육성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R&D와 사업화를 지원*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0년 2,100억 원) : 제조업 기반 융복합 산업 48개 선정

- 지금의 산재된 지역중소기업 지원,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의 지원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주도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밀착 지원, 복지 예산 집행 등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반면, 지방재정의 자체 세입 비중은 낮고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 편차가 확대

*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지출 규모 (2013년) 154.4조원 → (2021년) 259.4조원으로 증가, 지방세 비중은 (2015년) 24.6% → (2021년) 24.7%로 답보¹⁰⁾

- 지역소멸-경제 양극화-기업 활력 저하의 악순환적 연결 고리를 끊는 기업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인프라 지원 필요



8) 최근 추진되는 정책은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핵심 주체를 지역의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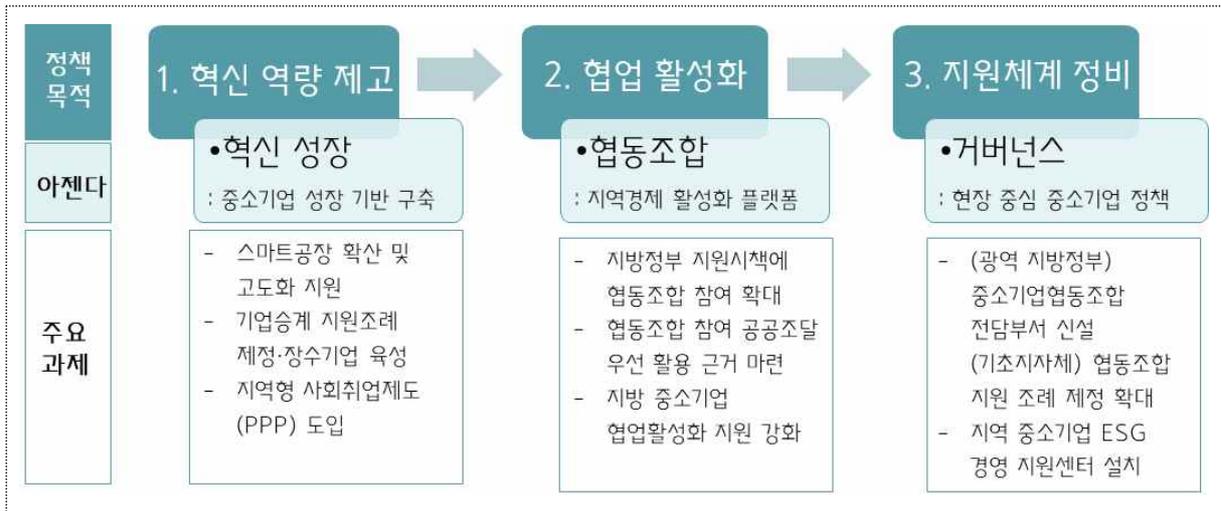
9)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 (2022.02.27.) 비수도권 기업 513개사 대상.

10)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1)

참고.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아젠다

□ 지방소멸위기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목적과 추진 전략 아젠다

- 최우선적으로 ①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해야함
- ① 과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도록 ②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②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③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정비가 선결되어야함
- 각각의 정책 목적으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아젠다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2020). 인구로 보는 OECD 국가의 지역·도시.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Brief, 제 5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2021). 지역별 고용 격차와 불균형.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제8호.

국회예산정책처 (2021).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OECD국을 중심으로.

국가청렴위원회 (2007).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5).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국토 2005년 12월호 (290호).

국토연구원 (2021).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목표. 국토 2021년 1월호 (통권 제 471호).

국토연구원 (202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국토이슈리포트. 제 57호.

국회예산정책처 (2021).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입법조사처 (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NARS 입법·정책, 제 8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19-16.

법제연구원 (201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산업연구원 (2018). 지역혁신지수 분석 결과, 비수도권 등 낙후지역 중심의 혁신정책 필요성 시사, i-KIET산업경제이슈, 제 43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2020)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2019).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발표. 2019.05.23.